

# 미국 바로보기와 한국의 평화-민주주의

송병헌

## 미국 관련 두 사건이 던지는 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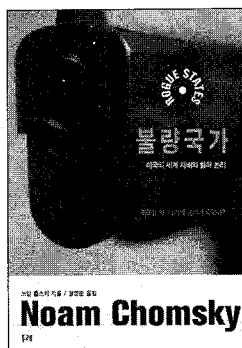
최근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군 장갑차에 치어 의정부의 여중생들이 사망한 사건은 주한 미군이 주민의 삶에 미치는 고통을 다시 부각시켰다. 또한, 북한에게 '선(先) 핵포기'를 요구하면서 이를 1994년 체결된 제네바 합의의 폐기 시도와 연결시키는 미국의 태도는, 미국의 요구에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1994년 한반도에 몰아닥친 전쟁의 위기를 재연시킬 우려도 낳고 있다. 미국과 관련된 최근의 사태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 문제가 더 이상 중동이나 남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과 평화,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깨닫게 해줬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공격과 이라크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를 전쟁 속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를 결정을 쉽게 검토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자세와 여중생들을 친 장갑차 운전병 등에게 미군 재판정이 내린 무죄 판결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로 봐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미국 바로보기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광주사태 이후 나름대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비판 의식은 평화나 인권과 관련된 위와 같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더 넓은 대중적·시민적 기반을 획득하게 됐다. 그러나 아

직도 한국에서는 미국을 보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시각이 병존하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한국을 구원한 나라이며, 오랫동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잘 지켜지는 사회 정치적 제도들의 가장 좋은 모델이었다. 미국은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인권, 민주주의, 자유, 정의 등을 위한 투쟁의 지도자로서 찬사를 받아 왔다. 미국은 '세계화'의 선두주자요 여전히 '기회의 땅'이 아니던가. 그러나 미국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있다. 이 비판적 시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소개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미국에 대한 시각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쪽으로 편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의 실체를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미국의 여러 정책들과 그 뿌리를 이해할 수 있고, 미국의 정책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두 권의 책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의를 소개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조심스럽게 답하고자 한다. 이 두 책은 노암 촘스키의 『불량국가』와 하워드 진의 『오만한 제국』이다. 이 책들에 따르면, 이라크와 북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밀어붙이기식 패권주의는 긴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것이다. 이런 대외 정책은 미국 내의 정치 제도 및 정치 세력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다시 이런 문제는 미국의 사회적 모순과 불의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배태시켜 왔다. 이 책들이 보는 미국은 자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저편의 가난하고 혈벗은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보내지만, 살인적 폭력에 직면해 있는 미국 내의 흑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도 보내기를 거부했던 나라이다. 우리는 이 책들 속에서 미국이 국내 외의 민주적 정부와 민중 저항을 분쇄하고자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해 저질러 온 폭력의 실상과 마주하게 된다. 이 책들은 바로 이것이 미국이라고, 미국과 관련해 주도되어 온 허상과 환상을 넘어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내 정치의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곳은 '제3세계적' 초강대국 미국의 초라하고 '일그러진' 초상인 것이다. 그 초상 아래로 찬연한 빛을 발하는 것은 미국의 정치가들이나 기업가들이 아니라, 사회 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온 미국의 민중들이다.

## 미국 대외정책의 실상

익히 알다시피 노암 촘스키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가 특히



주목받아온 이유는 그가 미국 사회와 현대 문명의 야만성을 꾸준히 일관되게 비판해 온, 그리고 그 비판을 행동으로 몸소 실천해 온 비판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이라는 점에 있다. 그의 논조는 냉철하고 간결하다. 그리고 그 간명한 문장 속에 미국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비판의 칼날이 번득인다. 촘스키의 저서들과 관련서들은 이미 한국에서도 여러 권 소개된 바 있으며, 특히 작년 9·11테러사태 이후 그의 저서들과 관련 점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촘스키의 여러 저서들 중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체적으로 분석·비판하고 있는 것이 『불량국가』이다. 책의 제목은 양의적이다. 이 제목은 스스로 '인도주의적 문명국'이라고 자처하지만 미국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 온 국가를 일방적으로 "불량국가들"이라고 지칭하는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며, 아울러 실상 미국 자신이 "불량배 초강대국"(85)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로 『불량국가』가 보여주는 미국의 모습은 보수 정치세력과 경제적 기득권층의 이해를 위해 국제법과 국제적 규약을 무시하면서 약소국을 향한 침략과 테러, 경제제재,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강요 등을 서슴지 않는 "악탈적 강대국"이다.

'적'이 사라진 냉전 이후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소련의 견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는 자신의 충실한 공격용 주구 역할을 하는 영국과 더불어 미국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적과 새로운 구실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동원된 개념이 이른바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을 지칭하는 '불량국가들'의 위협이라는 것이다. 결국 '불량국가들'은 군사력 사용의 구실을 소련이 아니라 제3세계에서 찾고자 동원된 개념이다. 그러나 '불량국가들' 아래에 놓인 논리 구조는 과거 냉전논리의 연장선상

에 있다. 왜냐하면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불량국가들’ 또한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파괴자’이며 ‘교란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개념이 어떤 보편적 원칙이나 기준에 입각한 개념이 아니며, 미국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관점이 담겨 있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개념은 미국의 의사와 미국 주도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세계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어떤 국가에라도 적용될 수 있는 자의적 개념이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위험한 개념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점에 따라 적용될 때, 이 개념은 그 적용받는 대상에게 지극히 폭력적이고 강요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 개념은 1648년 이래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그리고 이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 세계 국가들에 의해 확인되어 온, 민족국가들의 자유와 주권의 평등성에 기초한 세계 질서라는 역사적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개념이다. 게다가, 민족국가들의 평등에 기초하는 국제 평화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불량국가들’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개념의 타당성과 설득력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오만과 독선이다. 세계 평화와 안정을 깨치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잘못된 정책과 오만한 개입이며, 실제로도 아랍 세계의 모든 거리에서, 한국에서 점점 더 분노의 함성이 들끓고 있다. 촛스키는 『불량국가』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중점적으로 비판한다. 그 비판의 주요 대상은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개입, IMF와 세계은행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이다.

우선 미국은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미화하며 수많은 직접 공격과 테러, 테러 지원을 감행해 왔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식민지 전쟁 중 하나인 필리핀 정복전쟁을 감행했고, 수십만 명의 필리핀 사람들을 살육했다. 이런 살육 행위를 교화하는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미화됐다. 또한 미국은 공산주의자의 영향에서 베트남을 ‘보호’하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 개입, 수많은 베트남 민중들을 살육하기도 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무시한 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등을 용인하기도 했으며, 1998년 유엔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라크를 공격하기도 했다. 촛스키는 “이런 오만한 태도는 현대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34)이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우려와 질문을 제기한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도 많이 있다. [...] 그러나 어떤 국가도 이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26),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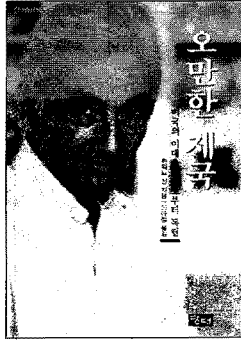
리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폭력과 파괴를 저지르는 똑같은 치외법권적인 권리를 미국처럼 어느 나라에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134). 또한 미국은 미국의 이해를 위해 수많은 독재 정권을 지원했으며, 반대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저항하는 진보적 정권을 전복하거나 민중적 저항을 억압하기도 했다. 미국은 1975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과 동티모르 주민 학살을 지원했다. 미국에게 “인도네시아는 중요하지만, 동티모르는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99). 또한 미국은 1973년 칠레 등 많은 민주적 정부를 제거하거나 전복했다.

그 다음으로 촘스키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이 국내외에 가져온 폐해를 지적한다. 촘스키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모든 것을 잘 알아서 한다는 ‘종교’에 대한 맹신”(179~80)이며, “‘무역’을 인간의 가치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격상시킨 광신적인 정치 신화”(134)이다. 그 파국적 결과는 무엇인가? 금융자유화는 등은 선진국에서도 저성장과 저임금 경제를 초래했으며, 대다수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입은 정체 상태에 빠지거나 후퇴했고 단지 상위 몇 퍼센트의 인구만이 막대한 수입 증가를 누렸다. 한편, 제3세계에 미친 영향은 더욱 파국적이라고 촘스키는 지적한다. IMF와 세계은행의 해외개방 프로그램은 남미를 위시로 한 여러 나라들의 농업생산 기반을 파멸로 이끌었다. 수많은 제3세계 나라들이 주요 자산을 (거의 언제나 외국) 민간 기업에 팔아 넘겼고, 공공 수도시설의 매각과 수도세의 인상은 민중의 빈곤을 가져왔으며, 이에 항의하는 민중의 시위를 촉발시켰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는 빈곤층의 급격한 증대와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이다.

결론적으로 촘스키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개혁하고, 이 개혁을 위해 실천하고자 호소한다. “미국에 맞춰져 있는 초점은 일그러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 오늘날의 질서는 인간 제도의 틀 속에서 인간이 결정해 만들어 낸 결과이다. 따라서 그것은 수정되거나 바꿀 수 있다. “이런 책무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고비마다 수행해 왔던 것이다”(339).

## 미국의 이데올로기와 현실

하워드 진은 미국의 실천적 사회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이다. 그는 민중사적 관점에서 많은 저술을 발표해 왔는데, 특히 그의 『미국민중저항사』(일월서각 1986)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도 일찍 소개된 바 있다. 그는 하층 노동자의 삶을 몸소 경험했고,



남부 지방의 흑인민권운동 등 사회운동의 전면에 나서 실천 활동을 해왔다. 이런 저자의 이력 때문인지 그의 『오만한 제국』은 쉽고 열정적인 문체로 씌어 있으며, 책 곳곳에 그 자신의 솔직한 경험담이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사회 개혁이라는 이상을 향한 열정, 실천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 실천을 위한 호소가 스며 있다. 『불량국가』가 대외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다면, 『오만한 제국』은 플라톤이나 루소 같은 고전적 정치사상가들과 저자 자신의 경험을 넘나들며 미국의 대외 정책 아래 놓인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와 상호작용해온 현실의 뿌리를 추적해 분석하고 있다. 즉, 『오만한 제국』은 미국의 오만하고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조건지은 이데올로기적 환경과 미국의 정치제도적·경제적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저자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자의 실천적 관심 때문이다. 즉, 저자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미국 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이데올로기는 미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배적인 사회 관념이라고 보며, 그 중에서도 현실주의,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자유방임주의 등이 중요하다고 꼽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마키아벨리적 현실주의 노선을 추종해 왔다고 본다. 미국 외교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원자재 확보 같은 현실적 이해라는 것이다. 다른 도덕적 관심이나 인권 문제는 모두 이 현실적 이해의 뒷전으로 밀린다. 저자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를 “석유의 평화, 금의 평화, 해운업의 평화, 요컨대……도덕적인 목적이나 인간적인 관심이 배제된 평화”(156)라고 말한다. 미국은 이런 이해를 위해 줄곧 비민주적인 정권, 더없이 사악한 독재 정권을 지원해 왔으며, 수많은 인명

의 희생을 무릅쓰고 전쟁을 감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패권적 대외 정책을 정당화해온 이데올로기가 반공주의라고 저자는 말한다. 반공주의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저항하는 제3세계의 민주 정부를 분쇄하기 위해, 그리고 미국 내 개혁 세력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미국의 보수 세력과 언론이 줄곧 동원해온 정당화 논리이다. 미국의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국 시민을 감시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게 만들었던, 히스테릭한 공포를 수반한 광기적 정서였다. 미국의 특유한 국가주의적 풍토와 탄압의 역사, 그리고 보수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외에서 전개된 일체의 사회개혁적 시도들은 반공주의의 명분 아래 탄압받아 왔던 것이다.

저자는 이런 비합리적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가능하게 한 조건으로서,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현실과 경제적·사회적 현실 및 이데올로기를 분석한다.

저자는 ‘법 앞의 평등’이 외쳐지고 있지만 실제로 법의 적용이나 경제적 현실에서의 불평등이 지속되는 미국의 현실을 비판한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의 전범이라는 미국에서도 이른바 ‘법의 통치’는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해소하지 못했으며, 그 불평등을 법의 권위로 강화했다고 말한다. 오늘날에도 착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그 착취는 시장경제 사회의 복잡함 속에 존재하며 법전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미국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결정적 결함은 대의 과정의 부재 내지는 결함이다. 대의 정책 같이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수 시민들의 견해가 존중되는 일은 거의 없다. 미국이 이제까지 수행한 부당한 대외 전쟁과 비밀 공작들이 전혀 국민(혹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행된 현실에 대해 저자는 개탄한다.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적 요소의 하나인 언론의 자유가 처한 현실을 향한다. 저자는 사상의 자유라는 고전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중핵이 과연 미국에서 보장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저자는 이 물음에 대해 회의적이다. 미국에서 사상의 자유는 보수적인 언론과 여론에게만 해당됐던 것이다. 조금이라도 사회 개혁과 진보를 추구한 사상가, 언론인, 예술가들은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를 안은 채 감시되거나 투옥됐고, 수많은 책과 영화가 압수되거나 상영 금지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마치 한국에서와 같이 불온분자를 감시하고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있어 왔고, CIA의 불법 도청과 가택 침입 등이 자행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저자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경제적·사회적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 1987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체 인구의 1/5, 즉 5천만 명 이상이 연평균 5천 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저자가 보기에 이런 미국의 빈곤은 불가피하거나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정책적 산물이며, 미국식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의 결과이다. 왜 스텔스기 생산을 위해 7백억 달러가 쓰이는 반면, 공공 주택과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팔려 있는 2백만 명의 살 곳 없는 미국인에게 줄 보조금이 삭감되어야 하느냐고 저자는 묻는다. 저자는 한 흑인 택시기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 정부의 실상을 “달러에 의한, 달러의, 달러를 위한 정부”(280)라고 냉소적으로 규정한다. 결국 저자는 “미국의 경제 제도는 어마어마하게 생산적인 반면에 부끄러울 정도로 낭비가 심하며 정의롭지 못하다”(303)라고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원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평등의 철학이 제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여전히 희망을 역설한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의 힘을 신뢰한다. “첫 번째는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정의를 위한 투쟁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 민중은 조직화되어야 하고 투쟁해야만 하리라.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게 된 사람들이야말로 궁극적인 힘이다”(522).

## 미국 바로보기와 한국의 평화-민주주의

『불량국가』와 『오만한 제국』은 미국의 실상과 그 이면에 놓인 제도적·이데올로기적 뿌리를 파헤치고 있다. 이 두 책에 담긴 내용의 주된 기초는 미국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이런 시각은 그동안 미국에 대해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가졌던 일면적인 관점을 교정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데 일정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미국에게도 여전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점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긍정적인 측면은 미국의 민중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지나긴 과정 속에서 획득한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시사적으로나마 간단히 부연하고자 한다. 한국이 미국을 바라보는 데 근본이 되는 관점은 한반도의 평화, 민주주의의 성장, 민족적 자주권의 실현 등의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근대



사에서 미국은 많은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으며, 현재도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늘 미국 주도 동북아 질서의 반공보루로서, 그리고 미국 자본의 투자처로서 기능해왔다. 한국의 역대 정권들도 미국의 전략과 구도에 늘 순응적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민족적 자주권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반도 민주주의의 전체적 발전을 고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입장은 빈번히 경시되거나 무시되곤 했다. 한반도에서도 관철됐던 것은 한반도 주민의 평화와 인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처럼 미국의 패권주의적 이해였다. 이번 ‘북한 핵 위기’에 관련해서도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과연 얼마나 한국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이해와 감정을 고려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다. 이번의 핵 문제는 지나치게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핵 문제에 관련해 북한 정권과 주민이 어떻게 느끼는지, 북한을 그렇게 몰아세울 때 어떤 반응이 야기될 수 있을지, 북한에 대한 강경책은 한민족 전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국이 자신의 입장만이 아니라 한국과 북한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미국의 자세 아래에는 강대국 미국의 오만함과 독선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대외 정책, 특히 제3세계에 대한 정책 기초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 계속되어 온 지난 50년 간의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하며, 강경 일변도의 대북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도 좀더 대등한 상호관계를 이뤄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은 정부의 좀더 자존적인 대미 외교 자세이다. 이번의 의정부 여중생 사망 사건에서도 미군 당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이고 순응적인 자세는 우리를 분노케 했다. 우리 국민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경찰은 과연 어느 나라의 경찰인가. 또한 대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해가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굴종적인 자세는 현 정부 아래서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저항운동만이 정부의 자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

---

송병현 bhgnatius@kdemocracy.or.kr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학술연구부장. 한성대 교양과 겸임교수. 주요 저서로 『왜 다시 사회주의인가』, 『현대 사회주의 이론 연구』 외 다수.